

독자권익위원 칼럼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높은 재정규모를 갖춘 재정자립형 광역특별시로 자리 잡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 논의가 이번이 처음일까? 아니다. 1995년, 2001년, 2020년에 이른 네 번째 시도로 갈등과 불신 속에서 동력을 잃고 번번이 멈춰 섰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도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번 통합은 과연 다를까?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요즘 지역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역업자는 손님이 줄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금난을 호소한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 통합 논의가 자칫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통합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운 문제일 수도 있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다. 일터는 광주에 있지만 집은 전남에 있는 사람도 많고, 소비와 여가는 지

광주·전남 통합, 우리 동네 경제는?

역 경계를 넘나든다. 그럼에도 행정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정책과 지원은 따로 움직여 왔다. 그 결과는 중복 투자와 비효율, 그리고 기회 상실이었다.

통합이 이뤄지면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경제 규모의 확대다. 인구와 산업이 결합 된 하나의 광역경제권은 중앙 정부와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광주의 인공지능·모빌리티·미래차 산업과 전남의 에너지·이차전지·해상풍력·농생명 산업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되면 이는 대형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역 교통망과 물류 체계가 통합되면 상권 간 이동성이 높아지고, 소비 시장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 절차가 단순화되면 각종 인허가와 지원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줄어든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곧 비용 절감이자 경쟁력이다. 결국 그 혜택은 지역 상권과 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재정과 정책의 자율성이다. 특별시가 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앙 기준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 과정에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광주·전남 신용보증재단은 단순한 보증 공급자를 넘어, 지역경제의 안전판이자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통합을 통해 보증 재원이 확충되고 정책금융

과의 연계가 강화된다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보증 상품과 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으로 금융 지원과 정책 자금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소상공인의 숨통은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위기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된다면 지금 당장 버티기에도 벅찬 영세 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통합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행정 통합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통합으로 얻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비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통합의 목적이 특정 지역의 성장이 아니라, 전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행정 중심이 일방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새겨들어야 한다. 그래서 통합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해야 할 과정이다. 통합의 이익과 부담을 공개하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의 핵심은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각자 버티는 방식으로 보는 한계가 분명하다. 통합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 사·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변화는 두렵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고

이경주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자 산업권이다. 많은 사람이 광주에서 일하고 전남에서 살거나, 전남에서 일하고 광주로 이동한다. 병원과 학교, 쇼핑과 여가, 관광 등산도 행정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기업 역시 투자와 인력 계획을 세울 때 광주와 전남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판단한다.

하지만 행정만은 여전히 나뉘어 있다. 계획은 따로 세우고, 예산은 따로 편성하며, 규정과 절차도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사업을 두 번 검토하고, 결정은 늦어지며, 기회는 흘러가 버린다. 행정의 분절이 계속될수록 지역이 치러야 할 시간과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된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자 생존 전략이다. 광주가 가진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제조 기반과 전남의 재생에너지, 해양·항만, 농수산 자원은 서로 잘 어울리는 강점이다. 두 지역이 힘을 합치면 혼자서는 만들

초광역 경쟁력, 행정통합에서 출발

기 어려운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이 결합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초광역 교통망 구축, 대규모 기업 유치, 규제 개선, 인재 양성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권한이 나뉘어 있으면 논의는 길어지고 실행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통합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서 통합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규모와 연결이 성패를 좌우한다. 콘텐츠 제작, 유통, 관광, 교육, 창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지식재산(IP)은 성장한다. 그러나 행정이 나뉘어 있으면 자원 체계도 조각나기 쉽다. 활영지와 관광, 축제와 콘텐츠,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문화 기반 창업 자원이 따로 움직이면 기업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청년들도 지역을 떠나고 만다.

반대로 행정이 통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광주와 전남은 K-콘텐츠와 AI 융합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기술(CT) 기반 초거대 도시 연결권이라는 분명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실제 경쟁력이 된다.

물론 통합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충분히 이해한다. 어느 지역이 소외되지는 않을지, 재정과 권한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지, 주민의 삶이 정말로 나아질지에 대한 질문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하지만 ‘완벽한 설계가 끝난 뒤 통합하자’라는 접근은 결국 통합을 미루는 이유가 되기 쉽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부안의 나열이 아니라, 큰 방향에 대한 합의다. 첫째, 권한과 재정이 함께 움직이는 실질적인 통합이어야 한다. 둘째, 동서·내륙·해양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완성해야 한다.

시간도 우리 편은 아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행정 통합 논의를 말의 영역에서 책안의 영역으로 옮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통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고, 누가 어떤 책임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세계의 산업 정책은 이미 초광역 단위로 경쟁하고 있고, 정부 지원과 규제 특례 역시 초거대 도시 연결권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제는 논의에서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미래 세대에게 기회가 있는 지역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다. 행정이 먼저 하나가 될 때, 산업과 문화의 융합도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사설

지역산단 한계… 구조전환 지금이 적기

지역 제조업과 일자리의 중심축인 광주·전남 산업단지들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상당수가 분양률과 가동률이 높아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입주 업종이 노후·고밀화되고 일부 산단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확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 미래 산업 수용력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로 지역 산단들은 분양률과 가동률이 높다.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에는 국가산단 2곳, 일반산단 8곳, 도시첨단산단 1곳, 중소협력단지 1곳, 농공단지 1곳 등 총 13개의 산단이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공장을 설립한 5236개 사의 90.9%인 4759개사가 공장을 가동 중이며 종사자는 7만3065명에 이른다.

생산 규모는 5397억7000만원, 수출은 402억4300만 달러이며 산단 대부분이 분양이 완료돼 있다.

전남도 국가산단 5곳, 일반산단 32곳, 도시첨단산단 1곳, 농공단지 70곳 등 모두 108개의 산단이 있으며 입주 기업 4013개 사에 고용 인원은 8만6816명에 달한다. 생산 규모는 총 135조원, 수출은 501억달러인데 생산의 대부분인 112조7000억원이 국가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전체 분양률은 97.6%나 된다.

문제는 이들 산단들이 신산업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있다.

광주의 경우 이들 상당수가 1980~1990년대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이미 입주 포화 상태가 돼 신규 기업 유입이나 업종 전환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없다.

또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산업시설용지여서 연구·개발, 시험·실증, 복합 업무 기능을 요구하는 신산업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신산업을 유치해도 머물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예기다.

전남은 생산과 수출, 고용이 소수의 국가산단에 집중돼 있다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국가산단이 전남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외부 변수에 대한 취약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들 산단이 100년, 20년 뒤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기존 산단의 업종 재편, 기능 고도화, 유연한 공간 활용 등 구조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주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됐다

나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정책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고 있다.

먼저 2022년 68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3년 연속 늘었다. 2023년 735명, 2024년 788명, 2025년 79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대한 기대감인지 나주 등록 임신부 수도 지난 2024년 780명에서 지난해에는 843명으로 63명이 증가했다.

한 여성의 가임기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수치인 합계출산율도 2023년 1.09명으로 도내 5개 시중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1.16명으로 전국 평균(0.72명)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는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나주시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나주시는 소득 기준과 횡수 제한을 폐지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결혼 여부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신 21주부터 출산 전까지 가정에서 가사 돌봄 관리사를 파견해 회당 4시간씩 총 4회 청소와 정리수납 등을 지원하는 가사돌봄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금 제도도 6개월 의무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주소지 등록 후 하루만 거주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대폭 개선했다.

2023년 7월부터는 지원 금액도 확대해 첫째가 300만원, 둘째가 500만원, 셋째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전남도 지원금 10만원과 나주시 출생 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매월 20만원을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 본소득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빛가람종합병원에 전남 최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재개원한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나주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취재수첩

행정통합, 지금이 골든타임

이현규  
정치부 부장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오래됐다. 필요하다는 말도, 시기상조라는 말도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 논의는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 더 검토해볼 사안이 아니라,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광주·전남의 변화에서 비롯됐다. 인구 감소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고, 산업 유치와 재정 확보는 개별 광역단체의 힘만으로는 점점 벅차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따로 움직이던 기존 구조로는 중앙 정부 정책이나 대규모 투자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인위에서 나오고 있다.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이유다.

논의 방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쓰였다면, 지금은 통

합을 전제로 한 운영 방식이 중심이다. 행정 조직은 어떻게 꾸릴지, 재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중앙 정부 권한은 어디까지 가져올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상황은 뻔하다. 통합 논의는 곧 정치 일정과 맞물리고, 그러면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본래 목적은 뒤로 밀린다. 통합은 정책이 아니라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 쉽다. 과거 통합 논의가 번번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통합을 전제로 한 제도 검토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고,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아직은 지역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다만 이 시간은 길지 않다.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지금 결론을 내리면, 통합은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무턱대고 속도를 낼 사안이 아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겹쳐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 기회가 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독자투고

블랙아이스, 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연쇄 추돌과 차량 전복 사고로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은 ‘블랙아이스’로 추정된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내린 눈이나 비가 도로 틈새에 스며 들었다가 추위로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듯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지방간 교통사고 4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빙판길 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2명으로 마른 길보다 약 1.5배 높았으며 특히 12월과 1월에 73.2%가 집중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하기 전 기상에보 확인 △급제동 및 급회전 금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운전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겨울철 도로는 언제든지 빙판길로 변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기상 정보와 도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면서 운전한다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고 도로결빙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김창희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위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